국민 54.4% "잼버리 파행 책임은 尹정부에게 있다"

에이스리서치 · 국민리서치그룹 여론조사 결과

전북도 18.2% · 文정부 18.1% · 여가부 6.7%

윤석열 정부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및 부실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및 부실운영 논란의 책임 주체를 물은 결과, 윤석열 정부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 18.2%, 문재인 정부 18.1%, 여성가족부 6.7%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라는 응답은 광주·전라·제주(68.2%), 남성(55.8%), 40대(69.4%),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6.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구·경북(23.7%), 부산·울산·경남(22.8%), 여성(19.7%), 60대 이상(26.5%),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0%), 국민의힘 지지층(40.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광주·전라·제주(9.7%), 남성(6.9%), 20대(11.2%), 30대(12.8%),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7%), 국민의힘 지지층(7.4%)에서 높게 나왔다.

'전라북도'는 광주·전라·제주(13.3%)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18.9%), 30대(22.8%), 60대 이상(22.9%),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0.9%), 국민의힘 지지층(3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40.4%), 전라북도(34.8%), 윤석열 정부(13.5%), 여성가족부(7.4%) 순으로 책임 소재를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87.5%), 여성가족부(5.2%), 전라북도(3.7%), 문재인 정부(2.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정부(65.1%)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라북도 16.6%, 문재인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7.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잼버리 진실규명 국회 대응 총력

도의회, 강병원 국회의원 등과 만나 조직위 · 전북의 역할 설명

전북도의회는 23일 국회 여야 의원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이른바 '전북 책임론' 등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염영선(정읍) 대변인과 김정기(부안)·김성수 의원(고창1)은 국회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간사)·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권인숙(국회 여가위원장)·김의겸(법사위원) 의원,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을 직접 찾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여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전북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챙겼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 주장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김성수·염영선·김정기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만나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나섰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국회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 고민정 최고위원,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김의겸 법사위원은 "최근 국회 행안위 잼버리 질의 파행은 여당이 전북도지사를 출석시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책임이 아닌, 정부 여당의 잘못임을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도의회와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정된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잼버리를 넘어 새만금 개발 감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론을 말한 것이지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에게 피해 줄 의중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가부와 조직위 회의록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중기·소상공 소홀히 할 우려… 세심히 살펴야"

도의회, 전북경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 전문성 · 업무 이해도 등 집중 검증

"자료제출 미흡… 원활한 청문회 진행 못해 유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9월 6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통해 5개 기관에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포함된 기관으로, 지난 4일 전북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돼 23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윤여봉 원장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KOTRA 리야드무역관 관장, 삼성전자 임원, 삼성물산 법인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알머스 상임고문으로 재직중이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최형열·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서난이·오은미 의원과 의장 추천 의원 오현숙·박용근·문승우·김슬지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대책,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영 계획 등 업무능력과 함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자격으로는 업무능력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덕성 판단도 중요한데 자료제출이 미흡해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며 "부실자료 제출로는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위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북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제출한 직무계획서 검토결과 새만금 그린수소, 기업유치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며 "대기업 출신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 임용된다면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위원은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그간의 수출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온 후보자가 경험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원장 임용이 되신다면 빠른 습득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없이 평가할 수 있느냐"며 "2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도비 사업에 대해 대책없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다."고 질타했다.

서난이 위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결과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담겨있는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라며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포부도 담겨있지 않는 성의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질타했다.

오은미 위원은 "삼성 및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핵심이며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악영향도 있는데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의 후보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횡포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며 "수십년간 근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대기업의 횡포에 대응해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명기한 기업유치 지원이라든지 sk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후보자가 임용이 된다면 진흥원이 하는 일부터 명확히 파악해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송하진 전 지사 부인 '집유'

재판부, '전북 자봉센터 관건선거 의혹'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원 등 실형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비서실장(4급) 2명과 전 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입당원서가 취합되어 명단이 작성·관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송하진 전 도지사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공무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한편, 오경진 여사는 전·현직 공무원들과의 조직적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자 도민들에게 사죄했다. /뉴시스